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3. 17.(화) 총 3매(본문 3)	
담당부서	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고통개발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서기관 박효철, 사무관 송혜연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, 3813
보 도 일 시		2020년 3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17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
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게 ...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

국토부-업계, 모빌리티 서비스 체감 위해 힘 모으기로 택시도 당연한 혁신주체,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뒷받침

-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,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.
 -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, 렌터카 기반 사업자,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*가 참석했다.
 - * KST(마카롱), 큐브카(파파), 벅시, 카카오모빌리티, 코나투스, 차차, 위모빌리티, 티원모빌리티, 우버코리아, SKT, 폴러스, 스타릭스, 코엑터스 등
- 김현미 장관은 “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,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”고 주문했고,
 - KST모빌리티, 벅시, 파파,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

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.

-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본격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3월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있다.
 -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,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.
 - 향후 카카오·마카롱 등 가맹택시, 반반택시,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,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①'규제 샌드박스'*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 - *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'반반택시'(코나투스)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'셔클'(현대자동차-KST)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영업 중
 - ②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 - 또한 ③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,
 - ④기사 자격을 1~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

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

○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,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,

- 전액관리제, 월급제를 시행하고,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,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“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, 원하는 방식으로,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,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”으로, “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”고 당부하고,

○ 특히 “코로나19 문제로 ‘안전 이동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 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방안을 고민해 나가자”고 제안했다.

□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,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,

○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택시산업팀 송혜연 사무관(☎044-201-3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